

2011년 국내정치 전망과 제언

고 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I. MB정부의 레임덕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 II. 한나라당 내부의 권력투쟁 빅뱅 가능성에 대해
- III. 진보개혁진영의 2007년 대선 프레임 탈출 가능성에 대해

2011년 새로운 해가 밝았다. 한국 정치에서 2011년은 어떤 해가 될 것인가? 2011년은 재보선이라는 조그만 선거를 제외하고 큰 선거가 없다. 그러나 2012년 총선·대선이라는 대회전을 앞둔 전초전의 해이다. 각 세력들이 2012년 대회전을 치르기 위한 기본 포석들이 2011년에 다 놓이게 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2011년에 전면전의 양상이 조기 가지화될지는 의문이나, 그것을 결정짓는 흐름의 기본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2011년은 결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작지 않은 것이다.

2011년의 정치전쟁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 우선은 아마도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예측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금 우리 사회의 시대 트렌드가 ‘정의의 열풍’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정의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가치와 비전 논쟁은 불이 붙었다. ‘무상급식’, ‘복지’, ‘공정사회’, ‘민주주의’ 같은 담론들은 ‘정의’라는 하나의 화두로 켈 수 있다. 여기서 정의란 구체적으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바로 이런 가치 이슈들이 2011년 한국정치의 무대 위에 백화제방의 전열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011년은 2012년 본격적인 권력투쟁을 놓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용을 짜는 전초전이 가치와 비전 논쟁의 장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물론 “부자 되세요”, “뉴타운 대박”으로 표현되던 2007년 ‘욕망의 정치’의 물결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욕망의 정치와 가치의 정치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혼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 트렌드는 한국정치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선 각 정치세력들과 차기 대권주자들이 나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가치전쟁에 뛰어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치에 민감한 20-30대 세대집단을 향한 진군을

경쟁적으로 벌일 것이다.

이와 같은 예측 하에서 2011년 한국정치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핵심적인 논점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첫째는 MB정부의 레임덕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MB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대 중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이다. 둘째는 ‘한나라당 내부의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각 진영의 주도권 쟁탈을 둘러싼 권력투쟁의 빅뱅이 일어날까’ 이다. 셋째는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개혁진영이 2007년 대선 프레임의 기나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다. 이제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점검해보기로 하자.

I. MB정부의 레임덕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첫 번째 문제. MB정부 레임덕은 얼마나 현실화될까? MB정부는 역대 최악의 무능정권이고 도덕성 또한 최저등급이다. 그런데도 MB정권의 지지율이 40-50%에 있다는 것은 정치전문가들 사이에서 최대의 미스터리이다. 필자가 보기에 MB지지율의 구조는 복잡적이다. 우선은 한국사회 특권적 과두집단들의 지배동맹이 MB정권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대항세력연합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반MB·반한나라당 기류에도 불구하고, 분산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 MB정권은 촛불집회 이후 특권지배동맹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집중시켰고, 상당 정도는 이 같은 역관계 구조를 잘 활용하였다. 바로 종편채널 특혜배분을 매개로 수구언론집단을 관리한 것이 그 사례이다.

다음으로 걸으려는 공정사회, 친서민·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마치 정치에서 초연한 것처럼 포장하는 정치공학기술도 지지율 유지에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40%대 지지율이 갖는 허수에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의 국면에서 여론조사 결과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유례없이 엄청난 규모의 무당파 층의 존재이다. 무당파 층의 성향은 6:4 내지 7:3 정도로 잠재적인 야권지지층이다. 게다가 국정운영 지지율이라는 것은 해당 시점에서 대통령의 스타일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성격이 강해서 상대적으로 일체감 여부를 묻는 정당지지율에 비해 선거에서의 충성도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 통례이다. 따라서 MB의 실제적인 국정운영 지지율은 적어도 1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야 실제에 접근한다. 그렇게 되면 실제 선거 결과에서 나타나는 지지율 구조와 얼추 비슷해진다.

이렇게 볼 때 MB정권이 레임덕을 견제하면서 정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특권지배동맹세력들이 MB정권의 유용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특권지배동맹 사이에 MB정권을 떠받치는 데 합의를 이루어 왔

다. 그러나 특권지배세력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권교체 국면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MB정권의 유용가치는 급속히 소멸될 수밖에 없다. 단물이 다 빠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MB정권의 지난 시기 동안 누적된 적폐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하면 집권세력 내 각 세력들에 의한 차별화 시도는 건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것이다. 억눌려있는 반MB 기류가 분출하기 시작하면 예전처럼 막을 수가 없는 수준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래서 MB정권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개헌’과 ‘남북관계’ 일 것이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의제를 이끌 동력이 고갈되어 있다는 점에서 거의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치적 압박카드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는 있다. 남북관계 카드는 국제적 흐름이 그렇게 돌아갈지, 북한이 MB정권이 원하는 판을 깔아줄지 미지수이다.

II. 한나라당 내부의 권력투쟁 빅뱅 가능성에 대해

두 번째 문제. 한나라당 내부의 권력투쟁 빅뱅이 일어날까? 우선 현실론으로 보면 한나라당은 영남 기반의 보수세력과 수도권 기반의 신주류 보수세력 간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양자의 선부른 분열은 어느 쪽에도 위험하다. 한나라당은 누가 주도권을 쥐든, 크게 이 두 개의 세력이 연합되어 있어야만 정권창출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다. 이 두 세력이 처절한 권력투쟁 상황에 돌입하게 되면 공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어느 세력이고 확전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의 입장에서는 정면충돌보다는 여론에 의해 혹은 MB세력 내분을 통해 자연스럽게 MB세력을 무력화 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2011년 말이 되면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마냥 충돌을 피할 수만은 없는 문제가 있다. MB세력이 자신의 존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권력을 분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든지, 아니면 2012년 총대선에서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확실하게 챙겨 세력을 잘 관리해 두어야 한다. 그런데 2012년에 들어 정권 말기가 되면 친MB세력이 총선 지분을 챙기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총선에서의 지분은 곧바로 이어지는 대선 후보 경선국면에 직접적이고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대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구조를 좀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이 부딪치는 상시적 딜레마는 다름 아닌 지지기반이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 영남 편중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폭탄과도 같은 것이다. 자칫 20-30대층에 바람이 불면 40대는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다가 대개는 20-30대층의 손을 들어준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정권을 놓고 만다. 2007년 대선 때에는 영남 보수에 수도권 신주류가 접맥됨으로써 한나라당의 그런 약점을 어느 정도 커버해 주었다. 물론 양자 간에 권력투쟁이 치열했지만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지지자들의 압력으로 내부의 균열을 봉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한나라당의 정치적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여도 면에서 MB세력의 역할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다. MB를 대체할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담이 없다. 미래권력으로 가는 길에 영남 보수세력은 박근혜라는 강력한 카드가 있는 반면에 MB세력은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MB세력은 갈수록 여론시장에서 청산대상이 되어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세력이 압도적 우위를 장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박근혜 역시도 수도권, 20-30대 층에 파고드는 외연 확장력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반대계보로서는 박근혜의 정권창출능력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면서 압박할 것이다. 여기에다 우익세력들이 박근혜의 정체성을 걸고넘어질 개연성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범보수세력으로서의 양대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을 중재해 줄 기준점을 합의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2007년에는 정권교체가 보수세력의 지상과제였고, 그런 관점에서 외연확장력을 가진 MB세력으로 정리해주는 것이 옳다는 합의가 비교적 쉽게 도출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박근혜의 압도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외연확장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선뜻 범보수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2007년에는 반대세력의 기반이 완전히 허물어진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지만, 2012년에는 최소한 득표율 격차가 3~5% 이내로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범보수세력의 관점에서는 선거승리를 위한 보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찾을 수밖에 없다. 물론 대안부재론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겠지만 말이다. 결국 이는 어떤 경우이든 한나라당 내 두 세력 간의 미래권력을 위한 접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결국 2011년에는 어느 세력이고 복잡한 딜레마 상황에 빠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단 MB정권의 레임덕 상황이 조기에 급격하게 가시화되지 않고 세력균형이 무너지지 않는 한, 총선을 앞둔 2011년 말의 시점에서부터는 지분을 둘러싼 양대 세력 간 권력투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예측된다.

III. 진보개혁진영의 2007년 대선 프레임 탈출 가능성에 대해

세 번째 문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개혁진영은 2007년 대선 프레임을 탈출할 수 있을

까? 여기서는 주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을 양해하기 바란다. 2007년 대선 프레임이란 ‘마의 25%’ 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민주당은 지방선거로 권력의 일부분을 수복하는 등 상황이 많이 호전되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도 이 프레임에 단단히 갇혀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여러 상황들은 야권에 유리하게 호전될 가능성이 크다. MB정권의 통치력이 이완되면서 저변에 광범위하게 깔려있는 반MB·반한나라당의 대중 동력이 확장과 분출을 시작하면서 의회권력과 정부권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열망이 고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세력이 지금까지의 늪을 탈출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당장 거대한 규모로 부유하고 있는 진보개혁적인 무당파 층을 자력으로 흡수할 방법이 지금의 민주당에겐 없다. 물론 그것은 다른 정당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무당파 층이 우연한 상황적 압력에 의해서나 한나라당의 실수를 배경으로 해서 결집해 줌으로써 야권이 반사이익을 챙기는 방법으로는 근본적 한계를 노정한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만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보적 무당파 층을 배경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려는 행동유인이 생겨나게 되어 진보개혁진영의 난립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과제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

하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를 비롯한 가치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최근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복지국가노선을 전격적으로 펼침으로써 가치전쟁의 선수를 잡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가치전쟁을 치루는 민주당의 모습은 위태롭기 짝이 없다. 내부에서 누구는 증세하자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난무한다. 또 가치전쟁을 치르기 위한 큰 전략지도가 없다. 궁극적으로 정확하게 겨냥해야 하는 지점이 어디이고, 전선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야 하는지 조감도가 없다.

다음으로 민주당은 연합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등으로 분립되어 있는 진보개혁진영의 질서를 어떻게 연대시킬 것인지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2012년 총선의 성패가 갈린다. 연합 문제만 제대로 해결해도 경우에 따라 의회권력을 교체할 수도 있다. 설령 그렇게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회권력을 거의 반분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선거와 달리 총선에서는 야권연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총선은 지방선거 때와는 달리 입체적이고 치밀하며 조직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연대가 그 만큼 쉽지 않다. 소수정당을 연합의 질서 속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협상(deal)할 것인지 복안이 있어야 한다. 협상의 이행을 강제할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바로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실질적 준비들은 2011년에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민주당은 인물 부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 야권에서 차기 대권주자로서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유시민, 한명숙, 손학규 정도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로서는 이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하고 솟구쳐 오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진 인물이 진입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신진인물이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 인물을 단련하고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개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위에서 언급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라도 이 문제가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다. 당을 개방시키고, 내부의 기득권 안주 구조를 혁파해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게 해야 당의 체질이 강해지고 역동성이 살아 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연합문제, 가치전쟁, 인물 문제 등이 상당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지금의 현역과 지구당 위원장의 50%는 교체한다는 강력한 배수진을 치고 가지 않으면 민주당 내부의 적당주의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올 가을 10.3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것을 가능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2011/01/25)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와 전화(02-733-3348)로 회원 등록 및 온라인 후원이 가능하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의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